

통합특별시-광주청-5개 자치구 ‘3중 행정체계’ 도입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 개최

민주 성지 광주, 전남 22개 시군과 다른 특수성 인정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통합 광역단체 산하에 별도의 ‘광주청’을 두는 이른바 ‘3중 행정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쟁점에 의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도 주문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1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경종 5·18민중항쟁 46주년 기념 상임행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최대 화두는 통합 이후 ‘광주시’의 위상 재정립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1000년 역사와 140만 인구를 보유한 광주가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 특별시-광주시(특별행정구역)-5개 자치구’로 이어지는 3단계 자치 구조 도입이 제시됐다.

기우식 광주시민협 사무처장은 “광주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 불의에 항거해 온 시민정신이 깃든 세계적 유산이자 이념”이라며 “전남의 22개 시·군과는 다른 거대 도시 생활권을 운영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걸맞은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광주청’이나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미끼로 한 ‘딜(Deal)’ 방식의 통합은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는 졸속 통합 논의를 멈추고, 구체적인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통합을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화순-광주-목포, 광양-순천-여수 등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돼야 시도인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며 “통합과 연계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특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주민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의 동의보다 속도와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실상 주민 투표를 어렵다면 시민 공론화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통합의 회와는 별도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역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2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 국회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가동… 소상공인 행정 부담 뚫는다

26명 투입…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공모사업 지원 등 전담

광주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잠재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시비 3억원(특별조정교부금)이다.

지원단은 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골목상권을 직접 찾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 업무를 전

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개 자치구에 각 6명씩 균등 배분했으나, 올해는 시장과 삼정가가 가장 많은 북구에 9명을 집중 배치한다.

이어 서구와 광산구에 각 5명, 남구 4명, 동구 3명 순으로 인력을 배정했다. 예산 역시 북구 1억 200만원, 서구·광산구 각 6000만원, 남구 4600만원, 동구 32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단의 역할도 대폭 강화됐다. 단순한 가맹 등록 안내를 넘어, 상인회의 행정 사무를 보조하고 공모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시장 매니저’ 기능이 추가됐다.

지원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도 개편했다. 자치구 자체 교육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활용법과 맞춤형 지원사업 선별 노하우 등을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거둔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운영 결과 광주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8월 421개소에서 12월 말 643개소로 5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역시 1만 9095개소에서 3만 2968개소로 72.6% 늘어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지원단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손발이 되어줄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북구청장 입지자들 “행정통합 개인 거취에 이용말라”

문인 구청장 사퇴 철회 등 입장 표명 요구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문인 북구청장의 사퇴 철회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대원·김동찬·문상필·조호권 등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문 구청장의 말 바꾸기와 거취 혼선으로 북구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고했던 사퇴를 철회한 데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문 구청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이유로 시장 출마와 3선 도전 행보 사이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구청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행정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구청장에게 “그간의 거취 반복과 출마 행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개인 정치 행보의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민주당과 공천 심사 주체를 향해서도 “현직 프리미엄이 아닌 후보자의 신뢰성과 공적 약속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청장 측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가 금물살을 타면서 광주시장 선거 자체가 없어지고 통합 단체장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단 기초단체장 예비자격 심사를 신청했다. 아직 거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전남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도민들 의견 듣는다

31일 한국에너지공대서 정책대동회…27일까지 참여 신청

전남도가 도민과 함께 통합 지방정부 출범 이후를 논의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다’가 개최된다.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바란다’를 주제로, 행정 통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이 직접 통

합특별시의 주권자로 도시 설계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참석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진행을 담당한다.

정책 제안자는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되며, 행사 당일 제안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전남도 직원들이 직접 답변한다.

자유 발언 기회도 제공해 폭 넓은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참여와 사전 제안서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과 전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22)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도민의 집단지성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www.kwangshin.ac.kr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오후 2시

▶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